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丁 海 龜*
韓 鍾 洙**

目 次

- I. 序論
- II. 驅逐效果의 概念
- III.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經濟理論의 展開
- IV. 우리나라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대한 實證分析
- V. 研究結果 要約 및 結論

I. 序 論

政府支出 증가의 효과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 자체가 재정승수만큼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의 증가가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를 위축시킬수 있는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정부지출의 이러한 兩面性은 경제학의 역사와 정부의 경제정책 발전과정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財政赤字를 감수하더라도 공공사업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영국정부의 이른바 「財務省의 見解」는 케인즈의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즉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만큼 민간투자를 감소시켜 국민경제 전체의所得 및 雇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意見對立이 바로 정부지출의 驅逐效果 논쟁의 효시가 된 것이며 그 이후 이 논쟁은 정부의 재정규모를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논의의 초점이 되어오고 있다.

* 本 研究所 研究員, 經商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 經商大學 講師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기를 거쳐 이제 밖으로開放化, 國際化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안으로는分配, 福祉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등 정부의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규모는 크게 팽창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지출의 구축효과와 적정재정 규모문제에 대하여 국민 각계의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 목적에 다소라도 부응하고자 본 논문은 쓰여지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정부지출의驅逐效果에 대한 모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고 政府支出의 驅逐效果 여부와 지출의 구성내역에 따른 代替效果와 補完效果의 발생 여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政府支出의 驅逐效果問題를 實際經濟政策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本論文의 기본의도가 있다.

II. 驅逐效果의 概念

정부지출의 驅逐效果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民間投資를 비롯한 民間支出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공공경제활동이 民間經濟活動을 代替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이다.

Buiter(1979)는 驅逐效果를 기간별로는 短期와 長期驅逐으로 나누었으며, 經濟構造別로는 直接驅逐과 間接驅逐으로 나누었다. 단기구축이란 예를 들어 케인즈모형에 있어서의 재정지출의 一次的 effect만을 보기 위한 단기 모형의 구축을 말하며 長期驅逐은 富效果까지를 포함하는 궁극적인 효과를 보기위한 장기모형의 구축을 의미한다.

直接驅逐이란 활동영역에 있어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경제에 있어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어떤 매개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民間支出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支出에 의하여 民間支出이 즉각적으로 代置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것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超理性的인 통찰력에 의해서 정책효과가 經濟構造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전에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超理性(ultrarationality)驅逐이라고도 한다. 間接驅逐이란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어떤 매개변수를 통하여 민간지출을 대치하는 효과로서 정부지출이 利子率의 상승을 통해서 민간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David-Scadding(1974)은 直接驅逐을 構造的 事前的 驅逐이라고 하고 間接驅逐을 誘道的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 事後的 驅逐이라고도 했다. Blinder—Solow(1973)는 정부활동과 민간활동이 代替關係인가 補完關係인가에 따라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대치할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으나 이 방법에 따라 구축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정부지출의 財源調達方法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財政赤字를 國債로 충당할 때 利子率上昇을 통해서 민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國債의 富效果를 통해서 미치는 효과에 따라 驅逐效果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은 Buiter(1977)의 間接驅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B. Friedman(1978)은 구축효과를 實物的 驅逐과 金融的 驅逐으로 나누고 금융적 구축을 다시 去來的 驅逐과 資產選擇的 驅逐으로 나누고 있다. 실물적 구축은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있을 때 정비지출은 자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이전시킬 뿐 경제에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거래적 구축은 정부지출증가로 利子率이 상승하고 投資가 감소하는 경우로서 Buiter(1977)의 短期·間接驅逐에 해당된다. 자산선택적 구축이란 국채발행으로 재정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 資產保有選好 및 富의 效果를 통하여 民間支出이 위축되거나 국민소득의 증대가 억제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Buiter의 長期·間接驅逐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정부지출을 消費支出과 投資支出로 나누고 정부활동과 민간활동간의 관계가 代替關係인가 補完關係인가 生產性增大效果인가에 따라 구축효과의 발생여부를 규명하는 새로운 연구가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Blinder—Solow(1973)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연구를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을 Barro(1981, 1987, 1989), Ahmed(1986, 1987), Aschauer(1985, 1988), Aschauer—Greewood(1985), 李之舜(1988)에서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정부지출의 驅逐效果는 그 내용이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아직도 학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驅逐效果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공공경제활동이 민간경제 활동을 대체하는 複合의 概念(multidimensional concept)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政府支出의 增減에 의하여 民間經濟活動이 擴大되거나 萎縮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長期驅逐과 短期驅逐, 直接驅逐과 間接驅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直接驅逐에서도 政府消費 및 政府投資의 민간경제와의 代替關係 및 補完關係에 따른 驅逐效果까지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公共事業支出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古典派理論의 배경하에 있던

당시 영국정부는 이른바 「財務省의 見解」라는 공식의견을 제시하여 케인즈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財務省의 見解」란 국민경제의 한정된 質蓄水準에서 政府支出의 增加는 그만큼 民間投資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은 정부지출증가에 의한 효과를 상쇄함으로서 경제전체의所得 및 雇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驅逐效果理論의 褒시가 된 것이다.

케인즈이론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이 驅逐效果를 둘러싸고 論爭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그같은 케인즈의 發想을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통한 소득증가라는 이론체계로 발전시켰다. 한편 고전학파 경제학의 균형개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通貨論者를 비롯한 新古典學派類의 경제학에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에 관한 케인즈파 경제학자들의 理論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세기의 논쟁」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른바 財政·金融政策의 有效性論爭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고전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合理的 期待理論에서도 정부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케인즈파 이론에 반대하는 독자적인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지출의 驅逐效果문제는 財政·金融政策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온 데다가 그 내용도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정부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것을 주의깊게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론적인 학문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구축효과의 넓은 이론영역중에서 각자의 관심분야를 집중탐구하면 되겠지만 實際經濟政策次元에서 볼 때에는 經濟理論과 實際經濟政策活用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驅逐效果理論의 전개과정과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보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해 봄으로써 정부지출의 驅逐效果問題를 실제 경제정책수단에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III.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대한 經濟理論의 展開

1. 政府支出의 財源調達方法에 따른 財政政策의 有效性論爭

정부지출의 驅逐效果를 둘러 싸고 전개된 財政政策의 有效性論爭은 정부지출의 승수효과의 발생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견해차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케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인즈의 有效需要理論의 핵심부분이며 그의 이론이 IS-LM모형으로 체계화된 이후에는 매우 짜임새 있는 이론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즉 政府支出增加→乘數效果만큼 所得增加→去來的 貨幣需要增加→利子率上昇→民間投資의 減少→所得增加分의 縮小 및 乘數效果의 減少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설명되었다.

그러나 通貨主義를 이끌고 있는 M.Friedman(1962)은 1960년대초 미국경제가 겪고 있는 일플레이션 현상이 케인지안적 財政運用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정부지출의 증가가 승수효과에 의한 소득증가 보다도 物價上昇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케인즈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 학파간의 이 초기단계의 논쟁에서는 주로 貨幣需要 및 投資의 利子率彈力性의 차이에 의하여 정책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 쟁점이 되었으며 이 때의 驅逐效果는 이자율의 상승을 통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국민소득의 증가가 줄이들게 됨으로 短期·間接驅逐效果인 것이다.

그 후 M.Friedman(1972)은 재정정책의 有效性에 관한 케인즈학파와 通貨論者間의 論爭이 IS-LM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전개되는 것은 큰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有效性論爭은 재정지출의 一次的 效果(first-round effect)에 중요성을 두느냐 窶極的 效果(ultimate effect)에 중요성을 두느냐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의 쟁점을 한 단계 높이가 되어 長期的 驅逐效果를 주요쟁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케인즈파는 短期의 一次的 效果를 중요시하는 한편 通貨論者들은 궁극적 효과를 중요시함으로써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窶極的인 效果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기 위하여 그 재원을 國債發行으로 조달할 경우에 정부지출과 국채의 富效果(wealth effect)에 의하여 總需要가 증가하는 효과까지를 포함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궁극적인 효과를 포함할 경우에는 정부지출의 부효과가 민간지출을 증가시키고 국채의 부효과가 민간지출과 화폐수요를 동시에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효과의 종합에 의해 구축효과의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의 驅逐效果는 長期·間接驅逐效果가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어서의 財政政策의 有效性論爭에 있어서는 논쟁의 쟁점이 정부지출의 재원조방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모아지게 되어 財政赤字의 國債補填效果가 그 쟁점이 된것이다.

정부지출의 재원조달방법은 租稅增加, 通貨增加, 國債發行 등 3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원조달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체약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등 많은 연구와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이 Blinder-Solow(1973)와 M.Friedman(1972)이며 이하에서는 우선, Blinder-Solow(1973)와 M.Friedman(1972)을

產業研究

중심으로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그 후에 전개된 논쟁의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Blinder-Solow(1973)에서는 驅逐效果를 2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公共支出이 民間投資를 代替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데 미국의 TVA사업은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다면 민간부문이 투자를 담당하였을 것이며 이와 유사한 철도, 전력, 공항, 체신, 전매 등의 公共事業은 모두 그러한 代替可能性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방, 사법, 치안 등의 정부지출은 民間支出과 補完關係에 있어 代替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논문에서는 政府支出과 代替關係에 있는 民間支出의 驅逐, 즉 直接驅逐의 가능성성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더이상의 분석은 하지 않았다.

둘째 租稅, 通貨, 國債 등 정부지출의 재원조달에 따른 驅逐效果 즉 間接驅逐효과에 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경우에도 정부지출증가에 의하여 利子率이 상승하고 이자율에 민감한 民間投資를 감소시킴으로서 나타나는 간접구축효과는 초기단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했으나 큰 쟁점이 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논쟁의 쟁점이 된 것은 財政赤字의 國債補填效果에 관해서이다. 재정지출을 國債發行으로 보전하게 되면 국채의 富效果에 의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貨幣에 대한 需要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증가하는지에 따라 富效果는 확장적이 될 수도 있고 위축적이 될 수도 있다. 즉 國債支出에 의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稅收가 증가하는 한편 국채발행에 따른 國債元利金負擔도 증가하게 되는데 稅收增加와 元利金 증가부담 중 어느것이 더 크게 증가하느냐에 따라 國債의 富效果가 擴張的이 될수도 委縮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확장적인 경우 승수효과가, 위축적인 경우 驅逐效果가 발생하게 된다.

通貨論者들은 국채발행으로 財政赤字를 보전할 경우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감소함으로서 國債의 富效果는 위축적이 되어 驅逐效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Blinder-Solow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實證分析에 의하여 판단될 문제이지만 生產要素가 完全雇傭狀態에 있지 않는한 재정적자를 國債로 보전하더라도 경제가 크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없으므로 통화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그후 Tobin-Butter(1976), Butter(1977), Christ(1978, 1979), B. Friedman(1979), Mayer(1984), Infante-Stein(1976)에 의해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의 상대적 優越性의 效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케인즈파와 통화론자간의 이견은 短期效果에 있어서 상당부분 합의에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政府豫算 制約式 $G-T = \Delta B + \Delta M$ 에서 ΔM 의 효과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와 ΔB 의 효과를 비교할 때 ΔM 은 이자율 하락을 ΔB 는 이자율 상승을 가져옴으로 ΔM 의 효과가 ΔB 의 효과보다 확실히 더 확장적이라는 데 이론이 없었다. 다음 國債와 租稅效果를 비교하면 國債의 증가는 저축감소의 가능성이 크고 조세증가는 소비감소의 가능성이 큼으로 국채가 조세보다 더 확장적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長期效果에 대하여는 양학파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실증분석에 의하여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기존 실증연구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유도해 보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財政赤字의 國債補填에 따른 驅逐效果論爭은 사실상 國債의 純富(Net Wealth)를 전제로 하여 이론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Ricardian等價理論을 신봉하는 合理的 期待學派의 Barro (1974), Lucas(1976)등은 정부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財源을 租稅에 의해 충당하거나 國債에 의해 충당하거나 이것이 總需要에 미치는 效果 및 所得과 利子率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國債의 純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정적자의 국채보전효과는 먼저 純富效果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방안간의 효과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2. 財政支出의 性質別 구분에 따른 驅逐效果

정부지출의 驅逐效果를 둘러싸고 전개된 財政政策의 有效性論爭은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정부지출이 消費支出이냐, 投資支出이냐에 따라, 또한 정부지출이 民間部門과 代替關係에 있느냐 補完關係에 있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데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arro(1981, 1987, 1989)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Ahmed(1986, 1987), Evans(1985), Aschauer(1985, 1988), Aschauer-Greenwood(1985), 李之舜(1988), 李啓植(1988), 金誠恂(1990), 柳潤河(1991)등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을 消費支出과 投資支出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민간부문과의 관계에 따라 代替關係와 補完關係로 나눈 다음 정부지출들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는 것이다. 먼저 政府消費支出을 정부가 민간이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지출과, 민간이 마련할수는 있으나 어떤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產業研究

생산하여 민간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지출로 나눈다.

민간이 마련할 수 없어서 정부가 담당하는 정부기능은 국방, 경찰, 사법, 치안 등 純粹公共財로서 이러한 소비지출은 민간의 경제활동과 경합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활동을 한층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간지출과 補完的關係에 있다. 그러나 민간이 담당할 수는 있으나 정책목적상 정부가 담당하게 되는 정부기능으로는 교통, 통신, 체신, 교육, 전매, 학교급식 등 準公共財를 말한다. 이러한 정부소비지출은 민간부문에서도 지출할수 있으나 어떤 適正水準의 공급확보를 위해서나 경제전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임하게 되는 價值財로서 이 소비지출로 말미암아 민간경제활동이 일부 배제되거나 경합관계에 있게 됨으로 민간소비지출과 代替關係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정부투자지출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民間投資와의 代替關係 또는 補完關係에 있는 政府投資로 나눌수 있는데 보완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지출로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공원, 상하수도, 공해대책사업의 등의 社會間接資本과 汎用性이 있는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투자를 들 수 있고 대체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지출로는 의료시설, 학교시설, 주택건설, 에너지시설투자 등의 資本的支出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된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이 증가될 때 그것이 각각 국민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民間部門과 補完關係에 있는 政府消費支出은 그 지출이 증가할 때 민간소비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 볼 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間接的인 補完關係에 있음으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하나의 예이다 ((Aschauer(1989a), 李之舜(1988), 李啓植(1988))).

둘째, 민간부문과 代替關係에 있는 정부소비는 그 지출이 증가할 때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限界代替率이 負의 값을 갖게 되어 민간지출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부지출은 家計貯蓄과 政府貯蓄의 完全先見(perfect foreknowledge)假說, 그리고 Barro의 Ricardian等價原理 등의 이론과 유사한 가정과 전제하에서 민간소비지출을 감소시킬때 驅逐效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Bailey(1971, 1972), Barro(1974), Aschauer(1985, 1989a), 李之舜(1988), 李啓植(1988))).

세째, 정부투자지출이 民間의 投資活動과 補完的關係($f_k > 0$)에 있을 경우에는 정부투자지출의 증대는 민간투자를 증가시킴은 물론이고 민간소비도 증가시키게 된다. 정부투자지출의 증대는 민간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外部效果를 발생하게 하고 따라서 민간투자의 증가가 유발되어 경제전체의 생산량이 증대하게 된다. 경제전체의 생산증대는 가치분소득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민간소비지출도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Aschauer(1985, 1989b), 李之舜(1988), 金誠恂(1990)).

네째, 정부투자지출이 민간의 투자활동과 代替關係($f_{\text{投}}(0)$)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투자지출의 증가는 민간투자지출을 감소하게 하여 驅逐效果가 발생한다 (Aschauer(1989b), 李之舜(1988), 金誠恂(1990)).

3. 政府支出의 持續性程度에 따른 驅逐效果

정부지출이 持續的이냐 一時의이냐 하는데 대한 인식은 민간의 恒常所得에 영향을 미쳐 消費支出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정부지출의 증가가 일시적이라면 민간은 이것을 負의 臨時所得으로 인식하여 그의 항상소득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민간소비지출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대가 지속적이고 그것이 租稅增加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인식된다면 恒常所得假說이나 一生週期假說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의 항상소득이 그 만큼 감소되고 항상소득의 限界消費性向이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驅逐效果를 발생시킨다.

또한 정부지출의 변화가 지속적이나 일시적이나 하는 것은 민간의 投資活動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정부지출의 증감이 일시적이라면 민간의 投資活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것이 지속적이라고 인식될 때에는 民間의 投資가 증가하고 이것이 生產性에 영향을 미쳐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4. 經濟成長段階에 따른 驅逐效果

많은 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는 국민소득에 대한 정부재정규모의 비율은 크지 않으며, 정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도 政府消費의 비중은 작고 政府投資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부문의 資本蓄積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政府投資의 증가는 生產性을 증가시켜 民間投資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소득의 증가는 民間消費를 증가시켜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의 乘數效果는 1보다 크게 된다.

그러나 經濟가 성장함에 따라 國民所得에 대한 財政의 상대적 규모가 커지게 되어 정부부문의 資本蓄積이 충분히 형성되어감에 따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점차 작아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政府投資支出의 단위당 效率性이 감소하게 되어 民間投資와 所得增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정부투자지출의 生產性增大效果의 감소는 可處分所得의 감소, 民間消費支出의 감소로 이어져 驅逐效果를 발생하게 된다.

IV. 우리나라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관한 實證分析

1. 資料蒐集

(가) 歲出豫算資料

우리나라의 驅逐效果에 관한 실증분석은 근래에 와서 크게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른 재정지출의 분류 즉, 財政支出의 구성내역에 따른 驅逐效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財政支出을 消費支出과 政府支出로 나누고 또 이것을 民間消費 및 民間投資와의 관계에 따라 純粹公共財의 財政支出과 準公共財의 財政支出로 분류해야 한다.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민간소비와 競合關係에 있지 않고 補完關係에 있는 純粹公共支出과 민간소비지출과 競合關係에 있는 準公共財의 消費支出로 나누어야 한다. 純粹公共消費支出은 방위비, 경찰, 사법, 일반행정비 등이고, 準公共財의 정부소비지출은 교통, 통신, 체신, 전매사업 등의 일반행정비, 非義務教育의 교육행정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豫算構造는 이러한 정부기능의 歲出豫算이 소비지출과 투자지출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소비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년도별로 해당기능 및 사업의 歲出豫算書의 目別豫算에서 소비지출에 해당되는 예산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되는데, 과거 20년간의 豫算資料를 이처럼 消費支出과 投資支出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一般會計의 機能別 歲出豫算 중에서 방위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용 정부소비지출로 보기로 했는바, 여기에는 물론 그 비중은 크지 않지만 방위비중의 국방투자비,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지출에 충당하는 부분 등이 있을 것이므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政府投資支出은 소비지출의 경우와도 달라서 純粹公共財 및 準公共財 개념에 의해 민간 투자와의 관계가 補完關係인지 혹은 代替關係인지를 분류한다는 것은 개념상 어려움이 있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다. 政府投資支出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收益性 有無에 의해서 정부가 투자해야 될 투자사업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아주 적은 사업이나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성격은 불문하고 정부만이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므로 이러한 투자사업들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民間投資와 補完關係에 있는 政府投資支出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투자지출로는 도로, 항만, 공항, 공해대책 등 기본적인 社會間接資本(core infrastructure)과 범용성 있는 基礎科學 및 尖端技術投資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고 민간기업과 競合關係가 성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지출로는 주택건설, 의료시설, 중화학, 학교건설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재정부문의 투자지출을 농수산개발, 수송통신, 국토자원개발, 과학기술, 중화학공업, 교육, 기타사회개발, 주택건설 등으로 분류하여 이용했다.

(나) 政府豫算 이외의 資料

國內總生產, 民間消費, 民間投資, 政府投資는 國民所得計定 資料를 이용했다. 정부재정지출 및 그 관련 변수들과 민간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된 Aschauer(1989b)의 모형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民間資本스톡, 政府資本스톡, 製造業稼動率, 民間投資收益率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민간투자수익율은 韓國銀行 經營分析資料의 製造業經常收益率을 이용했고 정부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은 韓國開發研究院의 沈相達박사 주관으로 表鶴吉 교수에 의뢰하여 작성한 總資本스톡을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 이용했다. 이때 총자본스톡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할하는 데는 각년도의 總資本形成의 政府·民間比率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 방법을 이용했다.

이상의 모든 자료들은 1971-90년까지 20년간의 자료인데 이것은 분석모형에 이용되는 獨立變數가 3-4개 또는 5-6개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모형의 自由度확보를 위해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政府消費歲出豫算이 民間消費에 미치는 영향

政府消費支出豫算是 防衛費, 一般行政費, 地方財政交付金으로 나누고 이들이 民間消費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일단 모형에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기로 했다.

$$\textcircled{1} \quad PC = 144.9485 + 0.9031DE + 0.8584GA - 2.1101GR$$

(0.94) (1.79) (3.55) (-4.71)

(R² : 0.9980, DW : 1.65)

$$\textcircled{2} \quad PC = 380.6073 + 0.2253DE - 0.8334DE(-1) + 1.525GA + 0.4767GA(-1)$$

(0.87) (0.47) (-1.41) (3.08) (1.74)

-2.0814GR - 0.8049GR(-1)

(-5.28) (-1.82)

(R² : 0.9990, DW : 2.14)

(PC : 민간소비, DE : 방위비, GA : 일반행정비, GR : 지방재정교부금)

①식에서 防衛費와 一般行政費는 民間消費와 補完關係에 있음을 나타내고 地方財政交付金은 民間消費와 代替關係에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DW값이 너무 작아 自己相關의 우려가 있으므로 ②식에서 각변수의 前年度 數值를 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해 본 결과 DW값은 개선되었으나 t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어느 경우이건 추정의 信賴度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防衛費와 一般行政費는 민간소비를 增加시키는 효과가 있고, 地方財政交付金은 민간소비를 減少케 하여 驅逐效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3. 政府의 投資歲出豫算이 民間投資에 미치는 영향

정부투자세출예산의 민간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정부의 機能別 投資支出이 國內總生產增加에 미치는 生產性寄與度, 둘째, 정부의 投資支出이 民間投資에 미치는 영향, 세째, 정부의 財政支出과 民間投資의 收益率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政府投資支出의 民間投資驅逐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政府의 機能別 投資支出이 國內總生產增加에 미치는 寄與度

$$\textcircled{1} \quad Iny = 5.2462 - 0.0732InK1 + 0.1817InK2 + 0.0895InK3 + 0.2249InK4$$

(14.64) (-0.95) (2.35) (0.68) (2.17)

+ 0.0064InK5 + 0.1493InK6 + 0.3361InK7 - 0.0158InK8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0.18) \quad (1.80) \quad (2.45) \quad (-0.60)$$

$$(R^2 : 0.9989, DW : 2.31)$$

$$\textcircled{2} \quad Iny = 5.0349 - 0.0982InK1 + 0.3034In(K2 + K3) + 0.2115InK4$$

$$(23.71) \quad (-1.67) \quad (4.65) \quad (2.27)$$

$$+ 0.0086InK5 + 0.1576InK6 + 0.3315InK7 - 0.0116InK8$$

$$(0.27) \quad (2.35) \quad (3.88) \quad (-0.70)$$

$$(R^2 : 0.9988, DW : 2.38)$$

y : 국내총생산, K1 : 농수산개발, K2 : 수송 통신, K3 : 국토자원개발, K4 : 과학기술, K5 : 중화학공업, K6 : 사회개발, K7 : 교육, K8 : 주택건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投資豫算을 經濟開發, 社會開發, 教育으로 나누고 또 經濟開發은 그 기능이 다양하여 국내총생산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므로 이를 다시 農水產開發, 輸送·通信, 國土資源開發, 學術技術, 重化學工業으로 나누었다. 이들 투자사업지출이 國內總生產增加에 미치는 生產性 寄與度는 教育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과학기술, 수송 통신, 사회개발, 국토자원개발, 중화학공업, 주택건설, 농수산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과거 20년 동안에 정부의 教育 및 科學技術投資,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社會開發投資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농수산개발사업과 주택건설의 경우 그 彈力性가 負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 탄성치 자체의 크기도 작을뿐 아니라 신뢰도도 채택할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推定係數가 負로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는 주의를 요하며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農水產開發에 대한 투자는 농수산부문이 生產性이 매우 낮은 부문이고 또 생산효과도 상당한 회임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해서 그 投資事業支出의 年度別增減 패턴이 國內總生產의 增減 패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농수산개발에 대한 집중투자시기에 國內景氣는 이에 맞추어 浮揚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住宅建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의 주택건설투자의 증가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住宅建設投資와 國內景氣사이에는 時差 (time lag)가 항상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국내경기가 好景氣일 때 住宅需要가 급증하게 되어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서 정부의 주택투자에 대한 增加壓力이 가해지고 정부도 住宅投資를 늘리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투자가 한창 증가될 때에는

이미 국내경기는 下降하고 주택수요도 떨어지는 시기가 되어 결국 주택투자의 순환과 國內景氣의 循環(cycle)이 서로 어긋나게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이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실제로 주택건설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이 담당해 오고 있는데 정부가 부분적으로 住宅市場에介入함으로써 주택시장의 自律機能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농수산과 주택투자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1~2년 또는 2~3년의 時差變數를 적용해 보면 推定係數인 彈性值가 正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합당한 投資效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자체에 그치기로 한다.

(나) 政府投資支出이 民間投資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投資支出豫算을 농수산개발 등 8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GDP증가에 대한 寄與度를 분석해 보았거니와 이들 투자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自由度문제를 감안하여 변수의 수를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政府投資支出을 가급적 同質的인 機能으로 통합하여 農水產開發, 社會間接資本, 科學技術, 重化學, 그리고 社會開發로 묶어 정리하였다.

$$PI = -115.7211 + 3.2727AG + 4.4265SOC + 21.4687TC - 3.2968HI + 3.3181SD$$

(-0.25) (1.13) (1.43) (2.34) (-1.03) (2.35)

(R² : 0.9954, DW : 2.11)

PI : 민간투자, AG : 농수산개발, SOC : 사회간접자본, TC : 과학기술, HI : 중화학
공업, SD : 사회개발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開發投資, 그리고 대부분의 經濟開發投資支出이 민간투자를 浮揚(crowding in)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社會開發, 科學技術,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政府支出이 民間投資를 확실하게 增加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들은 민간자본의 效率性을 증가시켜 外部經濟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社會開發, 科學技術,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정부기능이 민간의 투자활동과 補完的 關係(f_補)에 있다고 결론지을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농수산투자도 민간투자를 驅逐하지 않고 浮揚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有意水準이 낮아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그 효과를 기대할 정도는 안 된다고 보며, 특히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유의수준은 낮으나 民間投資를 驅逐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본다.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集中投資하던 '70년대 中·下半月와 '80년대 中半月에는 한정된 자원과 자금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配分하게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委縮된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製造業은 수익성이 있는 산업으로 市場機能에 맞겨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건설·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 동안 정부의 중화학공업건설에 대한 직접개입은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의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는 民間投資를 驅逐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간섭이 민간의 투자활동과 代替關係($f_k(0)$)에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다) 政府의 財政支出이 民間投資와 民間投資의 收益率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투자지출 및 소비지출이 民間投資와 民間投資의 收益率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분석한 Aschauer(1986b)의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PI = C_1 + C_2 PI(-1) + C_3 + \phi + C_4 GI + C_5 GC + E_1$$

$$\phi = C_6 + C_7 T + C_8 InPK + C_9 InGK + C_{10} GC + C_{11} CU + E_2$$

PI: 민간투자율, ϕ : 민간투자의 수익율, GI: 정부투자율, GC: 정부소비율, T: 시간, InPK: 민간자본스톡의 자연대수, InGK: 정부자본스톡의 자연대수, CU: 제조업 가동율

民間消費率(PI), 政府投資率(GI), 政府消費率(GC)은 각각 民間資本스톡에 대한 民間投資, 政府投資, 政府消費의 比率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1971-9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한 결과는 Aschauer가 美國의 1925-85년간의 자료에 의한 실증분석결과와는 다소效果面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I = -0.0245 + 1.1443PI(-1) + 0.0025\phi - 26173GI + 0.8542GC$$

(-1.49) (5.01) (1.75) (-3.39) (1.27)

(R^2 : 0.9765, DW : 1.65)

$$\phi = -118.4059 - 1.4231T + 11.3733InPK + 0.3386InGK - 100.3219GC + 0.0759CU$$

(-1.75) (-1.96) (1.77) (0.29) (-1.56) (2.31)

(R² : 0.6679, DW : 2.04)

먼저 民間投資의 收益率에 미치는 영향은 民間資本스톡과 製造業의 稼動率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政府資本스톡도 신뢰도는 낮지만 민간투자의 收益率增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政府資本스톡이 그 정도는 약하지만 民間投資의 收益率增加에 기여한다는 것은 정부투자의 증가가 그 정도만큼은 민간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정부지출의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자. 정부투자지출의 급격한 증가는合理的인 經濟主體들에 의해서 설정된 投資率 이상으로 경제전체의 投資率을 증가시키게 되어 민간투자의 事前的 駅逐(ex ante crowding out)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한 Aschauer의 설명과 같이 政府投資自體는 民間投資를 駅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의 수익율과 전년도의 민간투자 및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政府投資의 直接的, 事前的 駅逐效果를 능가하게 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民間投資가 浮揚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間接的인 effect까지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民間投資가 浮揚되지 않고 駅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실증분석결과 정부투자지출의 浮揚效果가 확인되었고 또 경제이론상이나 실제 경험상으로도 정부의 투자지출은 민간경제활동과 補完關係에 있다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Aschauer의 모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政府投資支出의 effect를 분석하였으니와 社會開發投資와 대부분의 經濟開發投資가 國內生產性增加에 기여하고 民間投資를 浮揚하는 것으로 결론짓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重化學工業에 대한 투자만이 民間投資를 駅逐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研究結果 要約 및 結論

財政支出의 駅逐效果에 관한 논의는 종래 財政金融政策의 有效性論爭을 둘러싸고 재원

우리나라 政府支出의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조달방법에 따른 驅逐效果 발생 여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이 직접 민간소비나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연구되어 왔다. 어느 研究에 있어서나 通貨增發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의 경우 또는 短期的인 財政支出 효과 측면에서 볼 때에는 대체로 재정지출이 總需要를 증가시키는 충격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國債나 租稅增加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고 富效果나豫想이 감안되는 長期效果에 있어서는 驅逐效果에 관한 학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대부분 實證分析에 그 판가름을 맡겨 놓고 있는 형편이다.¹⁾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실증연구결과 財政支出의 驅逐效果(crowding out)를 인정하는 쪽과 浮揚效果(crowding in)를 주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완전히 양분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연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政府消費와 民間消費와의 관계, 政府投資와 民間投資와의 關係를 분석하여 驅逐效果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바 그 결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소비나 민간소비와의 관계가 代替關係이면 驅逐效果가 발생하고, 그 관계가 補完關係이면 浮揚效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예산을 보다 機能別로 세분화하여 民間所得增加에 기여하는 生產性 寄與度에 따라 民間投資와의 관계를 판단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기능별 정부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直接效果 분석을 통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研究發展의 최근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財政支出의 驅逐效果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財源調達方法에 따른 財政支出의 效果분석의 경우에는 理論的인 結論이나 기존의 실증연구결과가 대체로 일치함으로 따로 실증분석을 하지 않았다. 즉 通貨增發에 의한 재정지출증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國債發行, 租稅徵收에 의한 효과가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나며 消費支出의 效果보다는 投資支出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의 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이 민간소비 및 민간투자와 代替關係인가 補完關係인가를 분석결과에 의하여 파악하고 驅逐效果 또는 浮揚效果의 발생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먼저 정부소비예산 중에서 防衛費와 一般行政費는 民間消費와 補完

註 1) 政府消費支出이 民間消費支出에 미치는 효과와 政府投資支出이 民間投資支出에 미치는 효과는 앞에서 실증분석한 바와 같다. 한편 財源調達方法에 따른 정부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驅逐效果 및 浮揚效果에 대하여서는 실증분석 결과 柳潤河(199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결과만을 結論에 인용하였다. 즉 柳潤河에 의하면 消費支出의 國民總生產증가에 대한 탄성치의 크기는 通貨, 國債, 租稅에 의한 조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投資支出의 경우에도 소비지출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민총생산증가에 대한 탄성치가 通貨增發, 國債, 租稅의 순으로 나타나 기존의 경제이론을 뒷바침하고 있다.

產 業 研 究

關係에 있음을 쉽게 알수 있으나, 代替關係에 있는 세출예산은 장기간의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소비지출예산을 一般行政費, 防衛費 및 地方財政交付金으로 나누어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행정비 및 방위비는 확실하게 민간투자를 증가시키고 지방재정교부금은 민간소비를 驅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政府投資支出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投資支出豫算을 農水產開發, 輸送·通信, 國土資源開發, 科學技術, 重化學工業, 社會開發, 教育, 住宅建設 등으로 나누고 이들 각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國民所得增加에 미친 生產性 寄與度를 분석해 보았다.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이 教育이었고 그 다음 순서가 과학기술, 수송 통신, 사회개발, 중화학공업의 순으로 나타났는바 이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政府投資豫算支出이 民間投資에 미치는 영향은 社會開發, 科學技術, 社會間接資本, 農水產의 순으로 民間投資를 浮揚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문이 民間의 投資活動과 補完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重化學工業投資가 有意水準은 낮으나 民間投資를 驅逐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中化學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이 代替關係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지출의 구축효과와 부양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驅逐效果 및 浮揚效果의 順位別 體系

	財 源 調 達 方 法			비 고
	通貨	國債	租稅	
政府消費支出				
民間消費와 代替關係	c	b	a	驅逐效果
民間消費와 補完關係	a	b	c	浮揚效果
一般行政費	a ₁	b ₁	c ₁	浮揚效果
防衛費	a ₂	b ₂	c ₂	浮揚效果
政府投資支出				
民間投資와 代替關係	c	b	a	驅逐效果
重化學工業	c ₁	b ₁	a ₁	驅逐效果
民間投資와 補完關係	A	B	C	浮揚效果
社會開發	A ₁	B ₁	C ₁	浮揚效果
科學技術	A ₂	B ₂	C ₂	浮揚效果
社會間接資本	A ₃	B ₃	C ₃	浮揚效果
農水產開發	A ₄	B ₄	C ₄	浮揚效果

*a, b, c, A, B, C 및 1, 2, 3, 4는 效果의 크기를 나타내는 順位임.

*A, B, C>a, b, c보다 큰 效果를 나타냄.

〈參考文獻〉

經濟企劃院, 『財政關係統計集』, 1992, 豐算室.

金誠恂, 우리나라에 있어서 財政政策의 有效性과 動態的 驅逐效果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李之舜, 「公共支出과 經濟活動」, 『經濟論集』 제 27권 제 4호, 1988,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李啓植, 「貯蓄의 代替性과 財政政策의 有效性」, 『韓國開發研究』 제 10권 제 2호, 1988, 韓國開發研究院.

柳潤河, 「財政支出의 經濟的效果」,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1, 봄호, pp. 77—94.

丁海龜, 財政赤字의 國債補償效果와 國債의 適正規模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고려大學校 大學院, 1989.

_____, 「財政赤字 및 國債의 經濟的效果分析」, 財政論集 제 4집, 1990, 韓國財政學會.

_____, 「財政赤字와 利子率과의 關係」, 產業研究 제 12집, 1989, 檀國大學校附設 產業研究所.

韓國開發研究院, 「韓國財政 40年史」 제 4, 5권.

韓國銀行, 『國民計定』, 1990.

_____, 『企業經營分析』

_____, 『經濟統計年譜』, 1991, 『調查總計月報』, 각월분

Hak K. Pyo, 『A Synthetic Estimate of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1990』, KDI Working Paper No. 9212, 1992, 韓國開發研究院.

Ahmed, Shabil,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ment Spending in an Open Economy," J. M. E., 1986, PP. 197—224.

_____, "Government Spending, the Balance of Trade and the Terms of Trade in British History," J. M. E., 1987, pp. 195—220.

Aschauer, D. Alan and J. Greenwood,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C. R. C. C., 1985, pp. 91—138.

Aschauer, D. Alan, "Fiscal Policy and Aggregate Demand," A. E. R., 1985, PP. 117—127.

_____, "The Equilibrium Approach to Fiscal Policy," J. M. C. B., 1988, PP. 41—62.

_____,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 M. E., 1989a, pp. 177—200.

_____, "Does Public Capital Crowd out Private Capital?" J. M. E., 1989b, pp. 171—188.

- Bailey, M. J., National Income and the Price Level : A Study in Macroeconomic Theory, New York, McGraw Hill, 1971.
- Barro, Robert J.,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 P. E., 1974, pp. 1095—1117.
- _____, "Output Effects of Government Purchases," J. P. E., 1981, pp. 1086—1121.
- _____, "The Economic Effects of Budget Deficits and Government Spending," J. M. E., 1987a, pp. 191—193.
- _____, "Government Spending, Interest Rates, Prices and Budget Deficits in the United Kingdom, 1710 — 1918", J. M. E., 1987b, pp. 221 — 247.
- _____, "The Ricardian Approach to Budget Defici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89, Spring, pp. 37 — 54.
- Blinder, Allan S. and Robert M Solow, "Does Fiscal Policy Matter?", J. P. E., 1973, pp. 319—337.
- _____, "Does Fiscal Policy Still Matter?", J. P. E., 1976, PP. 500—510.
- Buiter, Willem H, "Crowding out and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J. P. E., 1977, pp. 309—328.
- Christ, Carl F., "A Simple Macroeconomic Model with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J. P. E., 1968, pp. 53—67.
- _____, "Some Dynamic Theory of Macroeconomic Policy Effects on the Budget Constraint," J. M. E., 1978, pp. 45—70.
- David, P. A. and J. L. Scadding, "Private Savings : 'Ultrarationality', Aggregation and Denison's Law," J. P. E., Vol 82, 1974, pp. 225—249.
- Evans, P., "Do Large Deficits Produce High Interest Rates?", A. E. R., 1985, March, pp. 68—87.
- Friedman, B., "Crowding out or Crowing in?" Economic Consequences of Financing Government Deficit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3, 1978, pp. 593—564.
- Friedman, M, "Comments on the Critics," J. P. E., Vol. 80, 1972, pp. 906—950.
- Infante Ettore F. and Jerome L. Stein, "Does Fiscal Policy Matter?", J. M. E., 1976, pp. 475—
- Lucas, R. E.,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 A Critique,"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 1, 1976, pp. 19—46.
- Tobin, J. and W. Buiter, "Long—run Effect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y on Aggregate Demand," Essays in Economics, Vol. 3, 1976, pp. 116—159.